

■ <요약> 국내 전자화폐 도입, 실현 가능한가

- (의미) 화폐 가치를 디지털 부호 형식으로 저장하여 상품 구매 시에 사용하는 전자 지불 수단임
 - (의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와 ‘광속(光速)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님
- (국내 현황) ‘한국형 전자지갑’ 사업을 비롯하여 시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상 단계 수준이며 향후 실용화 여부는 매우 불투명함
 - (문제점) 선진국에 비해 추진 정도가 2~7년 정도 뒤쳐져 있지만, 전자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허가 지연 및 각종 제한 규정 등 규제 중심적 접근, 업체·정부를 포괄하는 공조 체제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
-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과제
 -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기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자화폐 개발과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이 시급함
 - (정책 현안 점검) 전자화폐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통화정책의 효과 변동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의 검토와 대응책 개발을 사전에 추진
 - (추진체제 再정비)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정보통신업체, 가맹점 등이 참가하고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사업 추진 조직 구성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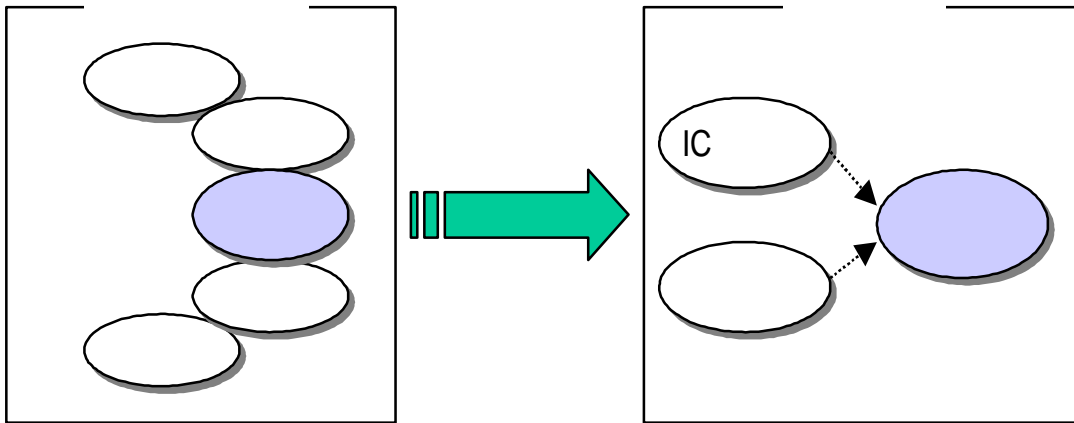
지식 경제 현안 **국내 전자화폐 도입, 실현 가능한가**

□ 전자화폐의 의의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란 화폐가치를 디지털 부호 형식으로 저장하여 상품 구매 시에 사용하는 전자지불수단¹⁾을 말함

-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 요구,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한 온라인 결제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전자화폐의 실용화 추진
- 이점 : 기존의 현금이 갖는 유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비용 감소, 결제의 신속성, 지리적 제약이 없는 결제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유형 :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IC카드형'²⁾과 '네트워크형'³⁾으로 나뉨

< 전자화폐의 배경과 유형 >



- 전자화폐의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와 '광속(光速)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짐

- 1) 전자결제와 전자화폐는 전혀 다름. 전자결제는 인터넷이나 전화선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등의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함에 비해, 전자화폐는 특정 주체가 발행한 디지털부호 형 결제수단으로 사용함
- 2) 플라스틱 카드에 내장된 IC(집적회로)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구매 시에 지불수단으로 용. 지하철·버스 승차권, 전화카드 등은 IC카드형 전자화폐의 초보적 형태라 할 수 있음
- 3) 소비자의 PC나 인터넷상의 가상은행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구매 시에 지불수단으로 전자상거래에서는 네트워크형이 적합하나, 장기적으로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통합될 것임

- 금융 서비스 고도화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한 결제, 원격 결제, 동전이나 소액 지폐 사용 대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차세대 금융 인프라 : 인터넷 거래 등으로 상거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 각광 받을 것임

□ 국내의 전자화폐 사업 추진 현황

- (국내 현황) 한국형 전자지갑(Korean Electronic Purse) 사업을 비롯하여 시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상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KEP 사업 :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시중은행, 신용카드 등이 참가하여 10월경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 몬덱스 사업 : 마스터카드가 국민은행, SK텔레콤 등과 공동으로 IC카드형 전자화폐인 몬덱스(Mondex)를 상반기에 시범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아이캐시(I - Cash) 사업 : 조흥은행, 데이콤, IBM 등 7개사가 인터넷 상거래에서 수수료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IC카드형 전자화폐로 98년 6월에 시연회를 가졌음
- (문제점) 선진국에 비해 추진 정도가 2~7년 정도 뒤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규제 중심의 접근, 공조체제 미흡 등으로 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실정임
 - 인식 부족 : 세계적으로 전자화폐 개발과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IMF 위기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함⁴⁾
 - 규제 중심적 접근 : 지난 해 전자화폐의 보안성 문제로 재정경제부와 안전기획부(現국가정보원)가 사업 허가를 늦추었고, 최근 발표된 KEP 사업 계획에 포함된 발행 주체 제한, 카드간 가치 이전 금지, 가치저장 한도 설정 등의 규정도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여서 전자화폐의 이점을 경감시킬 수 있음
 - 공조체제 미흡 : 전자화폐는 관련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일반 사업체, 정부 등 여러 주체간의 공조와 협조체제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위주의 공동사업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

4)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1998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대상 75개국서 7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도 11개국에서 도입을 추국은행, '전자화폐 사업계획 확정', 보도자료 (1999.1.4)

□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과제

-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기반 기술 개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전자화폐 개발과 시범 사업의 고속 추진이 시급함
 - 법제도 개선 : 전자화폐 도입에 제약이 되는 금융제도 및 보안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전자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법 제정 및 금융기관의 약관 개정
 - 기반기술 확보 : 전자현금의 요체는 보안기술이므로, 이를 국가적 과제로서 지원하고 개발해야 함
 - 정부 지원 : 전자현금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불가피함⁵⁾

- (정책 현안 점검) 전자화폐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의 검토와 대응책 개발을 사전에 추진
 - 정책 현안의 성격 : 디지털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전자화폐 관련 정책 현안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빠르게 변할 것임
 - 주요 정책 현안 :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 손실에 대한 부담 주체, 전자화폐의 불법 이용과 도용, 발행 주체의 범위,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파급 메카니즘, 전자현금의 자유로운 국제 거래,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리스크 부담 등 가능한 현안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추진체제 再정비)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정보통신업체, 가맹점 등이 참가하고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는 국가 차원의 전자화폐 추진 조직 구성이 시급함
 - 단순히 금융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금융인프라로서의 전자화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724-4046

5) 일본의 경우, 전자화폐 사업이 大藏省, 通産省 등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자율을 국에서조차, 연방정부,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이 참여한 FSTC(Financial Services Cooperation)이라는 강력한 컨소시엄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있음